

# 입법정책정보

2023. 5.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국회도서관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 목 차 ||

I. 상위법령 제 · 개정 .....	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1
2.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	3
3. 국가유산기본법 .....	4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 · 개정 .....	6
1.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6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8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9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	13
1. [독일]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 .....	13
2. [프랑스]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 .....	14

## I 상위법령 제 · 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4호, 2023. 5. 16., 일부개정]

#### □ 제 · 개정이유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법률 제1878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실태조사)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2021. 12. 29. 시행)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 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4.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단계별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0.] [대통령령 제33451호, 2023. 5. 9., 일부개정]

## □ 제 · 개정 이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2. 4. 15. 시행)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 □ 제 · 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 · 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 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 □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다음 세대에 계승·상속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색과 가치유형별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2.] [대구광역시조례 제5939호, 2023. 5. 22., 제정]

#### □ 제정이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 분석단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재정지원 신청일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3. 5. 1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613호, 2023. 5. 11., 제정]

## □ 제정이유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와 피해 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 □ 참고사항

### ○ 전국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불안감을 덜어주며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만들어짐.

이번 조례로 성동구는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할 계획.

###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안건번호:의견23-0060 /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 의뢰안건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의2 관련)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는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

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 추16 판결 참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제1항),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의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류제출이나 지방의회 출석·답변 의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법제처 2019. 9. 17. 의견제시 19-0270; 법제처 2020. 3. 24. 의견제시 20-0049 참조)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 [안전번호:의견23-0036 / 요청기관: 강원도 속초시]

#### □ 의뢰안전

주최·주관자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속초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속초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주최·주관자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속초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주최·주관자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속초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이 사안은 「속초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하 “속초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 “다중운집 행사”를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고,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천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속초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너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예시로 ‘재해 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바, 속초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속초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속초시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중운집 행사”는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제3항의 취지는 개최자가 있는 일정한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해당 지역축제의 개최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 또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임으로써 안전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최·주관자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속초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 [독일]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

#### □ 주요내용

- 최근 우리나라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하반기 지하철·버스 요금도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독일은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한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도이치란트 티켓(Deutschlandticket, 줄여서 D-Ticket)인 ‘49유로 티켓’을 2023년 5월 1일부터 도입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 이벤트성 교통티켓인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3년간 한해 15억 유로(약 2조 2천억 원)를 예산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다.
- 대중교통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독일은 49유로 월정액 티켓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49유로 티켓의 입법례를 참고할 만하다.

[출처] 국회법률도서관([원문](#))

#### □ 참고사항

##### <시사점>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인하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할인된 정액권 형태의 교통카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의 인하 또는 무료 정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재원마련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와 지하철을 운영하는 여러 공기업의 재정적자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0호, 통권 제222호)



## [프랑스]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

### □ 주요내용

-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약 220만여 명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4.8%가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집행중인 이민정책을 효율화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법무부 외청 형태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민 관련 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도 「제한 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개정(2023년 4월 18일)으로 설립 근거를 갖추었으나,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에 한계가 있다.
-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프랑스는 이민정책 및 행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을 두고 있고, 다양한 이민정책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Migrations internationales et minorité, MIM)>를 설립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권 법전」을 개정하고, 「국립인구통계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1986년 3월 12일 제86-382 호 법규명령」을 제정하였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는 우리나라에게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의 이민행정과 연구기관 운영 사례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법률도서관([원문](#))

### □ 참고사항

####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민관련 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 집행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이민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관련 연구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OFFI)은 이민자 수용, 지원 및 통합을 위한 행정, 정책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단일 행정기관으로, 합리적 판단 및 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근로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